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
경제**
nara.kdi.re.kr

K인사이트 2024

Contents

- 04 **경제성장률 2.2%의 의미**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 06 **돌발변수(Black Swan) 대응책 점검하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08 **은행 안정성과 경쟁 촉진 사이 균형점을 찾아서**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
- 10 **전환기의 주택 임대차시장: 주택임대업의 성장과 명암**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12 **아이 낳길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육아 부담 줄여주려면?**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14 **청년층에 불리한 주택청약제도, 과감한 혁신 필요하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16 **플랫폼 자율규제와 정부 개입의 최적점은?**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 18 **정부가 그만둘 일 14가지 유형**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20 **증가하는 가계빚, 부채 억제보다 포괄적 구조개혁이 중요**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
- 22 **지방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집중된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24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이유**
김주훈 전 KDI 선임연구위원
- 26 **엔비디아는 잘나가는데...삼성전자는?**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일러두기

1. 'K인사이트'는 KDI 연구위원들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나라경제』에 연재한 칼럼입니다. 본 책은 2024년 한 해 동안 쌓인 인사이트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2. 글에 언급된 날짜, 수치 등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KDI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하역 작업 중인 부산 신선대 부두.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2.2%의 의미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2023년 우리 경제는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경험한 적이 없다. 2022년 이후 극심한 고물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고환율(원화가치 약세)이 지속됐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2023년 저성장의 주요인이었다.

고금리 기조로 내수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은 회복

경기 부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산업 의존도가 높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켰다. 2023년 상반기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의 경제성장률 0.8%에 비견된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좀 나아질까? 대부분 전망기관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한다. KDI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경제성장률을 2023년의 1.4%보다 높은 2.2%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높다는 점에서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의 배경과 그 함의를 살펴보자.

2024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고금리 기조와 반도체 경기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2%인데,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3% 내외에 머물며 물가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022년 중에 6%

대까지 치솟았음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4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로존, 영국 등 주요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내외 경제의 고금리 기조는 경기 둔화를 유발한다. 2024년에 물가상승세가 점차 약해지면서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소 내릴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 IMF와 OECD에서도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3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대내외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2024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에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극도로 낮췄던 반도체 경기가 2024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고금리 기조로 인해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내수가 부진해 국민들이 경제성장률 상승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수가 수출에 비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고용 유발은 적은 특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며 2024년 말에는 고물가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내수 부진은 물가안정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편 고금리 기조는 건설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다. 건설수주가 대폭 감소해 2024년 건설물량도 축소될 수 있다. KDI는 건설투자가 1% 감소하고, 건설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부각됐는데, 2024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재무건전

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대외부문에서는 중국경제 불안이 눈에 띈다.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봉쇄정책 철회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부동산투자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소비와 제조업투자에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부동산투자는 더 부진해지고 있다. 부동산과잉투자가 조정되면서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특히 중국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을 받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면, 우리 GDP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예외조항 등에 따른 부채 증가, 금융건전성 훼손할 수 있음에 유의

내수 부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기는 어렵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 경영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편으로는 저금리 환경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더 생산적인 기업이 진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부채가 축소되기 마련인데,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규제에 예외조항이 많으며, 규제 취지를 벗어나 우회하는 현상도 있었다.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 점도 부채 증가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부채 증가는 금융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경기 변동에 집중하다 보면 중장기적 과제에는 소홀하기 쉽다. 특히 극심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으며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이 더욱 절실하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진입규제 완화 등에 정책역량을 쏟으며 성과를 내으로써 2024년에는 우리 경제를 희망차게 보는 시선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 ■

돌발변수(Black Swan) 대응책 점검하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미래연구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 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초점을 둔 외생변수 중심 연구다. 이 방식에선 외생변수를 전망하면서 그 조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기업 단위의 미래연구, 혹은 지구의 미래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

다음은 선호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할 일을 알아보는 내생변수 중심 연구다. 이 방식에선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BAU; Business As Usual)의 미래를 대부분 단일한 모습으로 상정한다. 그 모습과 우리의 선호미래를 비교해 지금 어떤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연구가 대부분 이 방식을 따른다.

정부의 미래연구는 지금의 정책선택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의 기본전략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발생가능성은 별로 없더라도 발생 시의 충격파가 엄청난 돌발변수(Black Swan)에 대한 대응전략은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발변수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우리의 기본전략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돌발변수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하는 역량과 발생했을 때의 대응전략은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 통신기자국 파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2년 전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 팀은 돌발변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30개의

돌발변수를 도출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우리가 꼭 대비해야 할 주제를 선정해 상술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의 시각으로 가장 중요한 돌발변수 7개를 고른다면 중국의 대만공격,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 주한미군 철수, 강(強)인공지능의 출현 그리고 아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북한·중국 등에 의한 해킹 혹은 인터넷망 공격이다. 2022년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2023년에는 시도·새울 행정정보 시스템과 정부24의 장애로 전국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도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우리의 인터넷 마비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다.

북한은 2022년 1월 한 미국인의 해킹으로 인터넷망이 6시간 동안 마비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송태은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04년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300배 이상 늘어났다. 북한은 이를 국가수입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확보 목적을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펼치거나 실제 통신 기지국 등을 파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이 마비되면 우선 전반적인 금융거래에 장애가 초래된다. 산업활동은 물론 국민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은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그 공격의 배후를 찾아 어떻게 보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사이버특보를 신설·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中 원전 관련 외교안보에 대한 준비 필요

다음으로, 중국 등 한반도 주변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사고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원전 사고의 파급력은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436기인데 중국은 그중 55기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은 총 159기인데, 그중 68기가 중국 것

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우리와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려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중국의 지진 진앙지이기도 하다.

산동성에 위치한 원전은 인천과의 직선거리가 350km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사흘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낙진으로 쌓이게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사고지점에서 유출된 양의 100분의 1 정도는 국내로 유입된다고 한다.

해양오염도 무섭다. 중국은 해상부유 원전 개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한국의 서해안은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 사태 해결에는 중국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습 노력이 중요한데 이 점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원전 사고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120여 개 측정소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백두산 폭발이다.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활화산이다. 최근 과학적 근거는 약하나 백년 주기설에 의해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946년에도 백두산에 강력한 폭발이 있었고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미쳤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의 기록은 많다. 서기 79년 폼페이와 함께 베수비오산,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화산,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화산 폭발이 그 예다.

화산이 폭발할 경우 사망 등 즉각적인 인명 피해는 폼페이와 같이 용암과 화산재로 인해 발생하나, 더 심각한 것은 독성가스와 이상기후, 오존층 파괴, 전염병 창궐 등이다. 남한도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두산 폭발로 북한지역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식량 및 생필품 부족, 경제활동 위축으로 정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는 주변국으로의 난민 유입으로 연결돼 한반도에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관계,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돌발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는 이미 많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실 혹은 대통령 안보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리스트를 면밀하게 점검해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

은행 안정성과 경쟁 촉진 사이 균형점을 찾아서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

은행이 높은 이자 수익을 누리며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전혀 없는 속도의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시현하면서 그 비난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5대 금융그룹의 2022년 이자 이익은 약 39조5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이자 이익이 더욱 증가해 약 41조4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중 몇몇 국가에서도 고금리로 늘어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은행의 수익으로 직결됐다는 비난과 함께 소위 횡재세 도입까지 논의되기도 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업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권의 경쟁 구도를 살펴본다. 마찰적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원론적인 상황인긴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그런데 은행이 이처럼 상당한 수준의 수익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은행들이 다소간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금리(가격)를 한계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호황 지속되며 경쟁 촉진 나섰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쳐

이처럼 은행이 다소간의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것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은행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며 시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기반으로 은행의 과점적 지위를 용인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 다양한 연결고리를 통해 복잡한 상호연계성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돼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내부

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난맥을 초래했다. 이는 실물경제에도 파급돼 2008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계절조정 기준 전기 대비 3.3% 역성장하며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성적을 마주하게 됐다. 이처럼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다소간 강화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적어도 은행권의 시스템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은행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은행의 추가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케이뱅크를 필두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은 은행시장에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 촉발돼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대출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던 중신용자 대출 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은행권 신용대출 접근성이 향상돼 기존에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차주 중 일부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향상은 주로 고신용층에 제한됐고 경쟁 강화로 인한 금리인하 혜택도 고신용 차주로 국한됐다. 심지어 저신용 차주가 받는 대출 중 일부에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도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안정적 과점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각 사업

자의 가격과 서비스가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경제학에서는 의식적 병행행위라 일컫는다. 이것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담합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시장 참여자가 일정하고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기 수월한 상황이므로 경쟁 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또한 경쟁 은행도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금리인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균형을 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장 경쟁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금리 경쟁을 제한하는 마찰 요인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 상품은 금리와 만기 조건만 동일하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든 큰 차이가 없이 매우 동질적인 상황이라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은행시장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먼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한 크게 기준금리, 가산금리 그리고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 대출금리를 구성 요소별로 분리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구성요소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각 은행을 돌아다녀야만 비교할 수 있었던 금리와 그 세부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업무 원가와 목표 이익률 등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의무로 공표하게 하는 것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투명화가 경쟁 은행 간의 민감 정보 교환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경쟁할 유인을 제한하거나 은행들 상호 간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리 실시간 비교 가능한 대환대출 플랫폼 통해 금리 경쟁 기대할 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출금리 구성요소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의 위험성을 회피하면서도 금리 경쟁을 제한하는 마찰 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기존 방식의 대출금리 구성요소 공개는 이미 지난 시점의 금리를 보여주며 특정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닌 평균 금리만을 보여준다. 반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특정 소비자가 현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은 은행 간 대출금리를 매우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환대출 신청으로도 곧바로 연계되므로 은행 간 금리 경쟁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형태다.

아직 은행권 전체 자산 규모에 비하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환 실적은 크지 않기에 향후 정책의 결과를 수단하긴 어렵다. 다만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은행권 시스템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음을 고려하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금리 경쟁의 심화가 당장은 은행권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은행 경쟁 제고 간의 상충관계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스템 안정성만을 위해 금융시장의 효율성 손실을 감수하는 것,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것 모두 지양해야 할 바다. 이번 정책 경험이 우리나라 은행시장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도 제고라는 상충관계 속에서 과연 적절한 지점은 어디일지 찾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

전환기의 주택 임대차시장: 주택임대업의 성장과 명암

문운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올해 들어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되는 분위기다. 반면 주택 임대차시장은 지난해부터 이어 온 월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도 소폭 상승 중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서민이 임대차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2천만 이상의 전체 일반가구 중 약 40%인 800만여 가구가 자가 아닌 타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다. 이들은 1년 혹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주거생활을 영위한다.

전세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낮추고 임대인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 활용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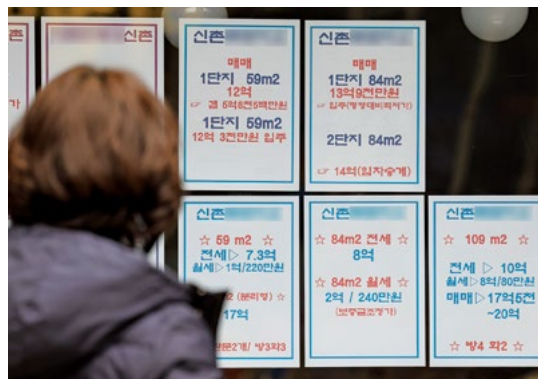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대료(월세)와 보증금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납부하는 금전이 임대료이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설정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용한 부동산을 보존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에 부동산이 훼손됐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기간 중 납부되지 않은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인은 미납부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의 규모도 클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2~6개월 정도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설정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대여하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있다.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세기 말에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 등 일부 다른 나라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가 보편적인 임대차제도로 자리 잡은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 시기는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세는 빠르게 보편화되며 1990년대에 임대차계약 중 70%에 육박했다. 일부 소규모 주택에만 월세가 적용됐을 뿐 대부분은 전세를 이용한 셈이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세의 비중도 점차 낮아졌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에 각각 전세 비중이 10%p 가까이 떨어졌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임대차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으며 50% 선이 무너졌다.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며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차인의 관점에서 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용이다. 전세의 보증금을 월세(임대료)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비율을 사용하는데,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5~6% 수준이다. 즉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더라도 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한다면 그 비용(대출이자)이 월세(임대료)보다 적게 든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거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상당히 보편적인 주



지난 2월 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택담보대출이 2000년대 이전에는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주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가 부족한 환경에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전세제도에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위험이다. 전세의 임차인은 주택 가격에 비견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보증금을 부동산 사용 대가로 임대인에게 빌려준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을 지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담보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금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은 전세 가격 혹은 주택 가격이 낮아질 때 커진다. 최근의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현상은 주택시장의 커다란 변동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세 관련 이슈들이 불거졌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택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도 증가했다. 전세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됐고 전세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월세화로 임대차계약이 보다 명확해지며

주택 임대업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비중은 약 45%다. 한때 40% 초반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며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지 않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위험이 낮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서는 전세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위험이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전세보증금의 미반환위험을 반영한다면 전세의 비용이 저렴하지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임차인 관점에서 월세

는 전세보다 직접비용이 큰 제도다. 따라서 주거지원의 방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월세는 전세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많지 않다. 정부는 전세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 미반환위험에 대한 보증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지원이 서민의 주거비용을 낮췄다. 앞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서민 주거지원의 초점을 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는 부동산과 전세보증금의 한시적인 맞교환으로, 월세에 비해 상당히 단순한 구조다. 임차인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 대여하며 부동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다. 하지만 월세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인은 다양한 규약을 설정할 것이다. 월세제도가 보편적인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스크리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임차인도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전세에서는 생략된 주택관리를 임대인에게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호 간의 요구가 높아지며 갈등이 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사용권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관계에 대한 규약, 즉 임대차계약은 보다 명확해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의 월세화를 통해 주택임대업이 성장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서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 관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사업체가 증가할 것이다. 임대료가 없는 전세를 통한 주택임대업의 사업성은 사실상 주택 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택 가격의 높은 불확실성이 임대사업의 한계가 됐다. 앞으로는 월세화로 임대업의 현금흐름이 보다 명확해져 주택 임대업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업의 성장은 임차인에게 관리가 잘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료가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월세 중심으로의 주거지원 전환이 필요하다. 가격 측면에서 월세의 임대료는 전세 가격에 비해 변동이 작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면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도 낮아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낳길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육아 부담 줄여주려면?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된다.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보육 기관, 육아에 대한 자신감 부족, 긴 근로시간, 지나친 경쟁문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다.

출산율이 낮으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기술발전, 교육훈련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여러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기관의 질적 제고와 부모의 육아 자신감 회복을 중심으로 출산율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근로·통근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는 것에 죄책감 안 들 만큼 기관의 질 높아져야

영유아 시기에는 교육·보육 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관의 수준을 부모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했을

때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제적·시간적·심리적으로 낮아져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다. 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거 법령, 관장 부서, 교사 자격 및 양성, 근무조건, 시설기준 등을 통합해 동일 연령의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이 질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부모의 비용 부담은 낮아져야 한다. 시간적으로는 거주지 인근에 우수한 기관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통근시간만큼 넉넉해야 한다. 질과 이용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질이 높아야 보장된 이용시간만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통상적인 근로·통근 시간을 포괄할 만큼 길게 뒤도 아이가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게 안쓰러워 조부모나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짧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다면, 특히 영아기에는 아동의 필요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교사가 있다면, 유아

기에는 교사-아동 간, 아동-아동 간 상호작용을 돕는 교사의 열의와 자질이 충분하다면 전일제로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동 발달에 해롭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주는 방안 또한 유보 통합안에 담아야 한다. 사람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면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곁에 있고 내 삶의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무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를 더 이상 갖기를 원치 않는 성인들은 성장기에 가졌던 부모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으로 바람직한 부모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부모의 양육 고민을 들어주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관과 가정에서 동일한 방향의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지원이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인식이 누적되고 확산돼야 한다. 유보통합 시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 아동별 성장기록을 작성하고 부모 면담에서 이를 공유한 후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직무 또한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 역량을 증진하면서 육아 부담을 심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아동 발달에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활동이 더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경제적 위계상 고위층 자녀들이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짓눌려 어긋난 사례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학원을 변변히 못 보내줬더라도 부모가 규율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부모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줬을 때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우 또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예산의 상당액을 영유아 교육·보육에 할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부모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뒀다. 그에 맞춰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생겨났다. 하지만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과 기관의 양적 확대로 출산 의향을 바꾸는 것은 제한적이다. 근로·통근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기는 게 죄책감이 들고 출근 전 들릴 수 있는 위치에 밟고 밟길 만한 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3-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부모가 어느 기관에 맡겨도 아이가 잘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유아교육 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 필요

‘잘 자란다는 것’ 그리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 유아기에 한글을 쓸 줄 알고 덧셈, 뺄셈을 할 줄 알고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우는 것이 잘 자란다는 것인지, 유아기에 초등학생처럼 한 반에 모든 아이가 일괄적으로 책상에 앉아 한글·수학·영어 학습지를 풀어야 하는지 등 유아 시기의 적기 발달과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기 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아동 발달의 장단기적 성과가 무엇인지 엄밀히 분석해 이를 부모나 예비 부모와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아이 미래에 해롭지 않다는 안도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것이다.

물론 출산 의향은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으려면 먼저 직무성과급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또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늘봄학교를 이용하면서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가 현재 양적 확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학교 밖 물리적·인적 자원을 학교 내 자원과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지, 늘봄인력의 재교육 및 양성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높은 주거비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이러한 산업의 수도권 집적과 연관돼 있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발전과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의 복합화와 개선 또한 추진해야 한다. 높은 양육비와 지나친 경쟁문화는 공교육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및 입시제도와 관련이 깊다. 공교육이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을 융합해 자신만의 진로를 선택하고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입시 과정에서는 이를 학습의 결실로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

청년층에 불리한 주택청약제도, 과감한 혁신 필요하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청약제도는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 당첨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활용해 주택건설 비용을 저비용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청약 당첨자는 2~3년 후의 아파트 준공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받으며, 통상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현재의 청약제도가 40대 이상의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고 청년에게는 불리해 청년 사이에서 소위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분양이 있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당첨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갭투자·영끌로 주택에 올인한 청년들,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로 큰 재정 압박

청년층은 2019년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보다는 구축 주택 구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해 2021년까지 기존 주택 매매를 활발히 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30대 이하 청년이 주택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대를 제쳤다. 2019년 주택매매 거래에서 40대 비중은 25.8%, 20~30대는 24.5%였지만 2020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26.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25.2%) 비중을 넘어섰다. 특히 2021년 수도권 경우 전체 주택매매에서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6%에 달하면서 40대의 22.3%를 크게 웃돌았다.

40~50대보다 자산과 소득이 적는데도 청년층의 주택매매 비중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존 주택을 구입)의 적극적인 활용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줄인 말로, 무리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사는 현상을 지칭)이 지목된다. 실제로 2020~2021년 서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갭투자 비중은 71%, 30대는 49%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청년층의 주택매매 거래가 활발했음에도 그들의 자가 점유 비중은 38.3%로 2020년의 40.7%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거주와 투자의 분리가 가능한 갭투자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갭투자와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하면서 침체하기 시작했다.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KB 월간 데이터 기준)은 직전 연도 말 대비 -3.12%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 들어 영끌 청년들 사이에서 개인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일부는 심지어 경매로 아파트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한편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은 영끌 청년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본인 총소득의 80%를 부채 원리금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다면 차입 비율이 높은 갭투자의 위험 부담을 덜고, 소수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은 없을까? 여기서 필자는 새



지난해 3월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그림〉 구분소유권 청약 모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의 보고서 「주택청약방식의 개선 방안(송인호, 2023)에서 재인용.

로운 주택청약 모델인 구분소유권 청약을 제안한다. 〈그림〉은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주택청약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도형화한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형태를 공모 상장의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주택 리츠는 소수 투자자 중심의 사모형이며 개인 대상의 공모 상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여기서 제안하는 주택의 구분소유권 청약은 공모 상장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특정 지역, 특정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 주택을 모아서 상품화한 펀드와도 차별화된다.

**소액 투자자에 공모주 우선 배정…
세입자는 기존 청약방식으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고 이를 증권으로 상장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택의 지분 소유를 위해 증권 공모 신청을 하고, 동시에 동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주를 위한 입차 청약에도 참여한다. 분양 청약이 아닌 일종의 임대 청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투자 수요를 구분해 증권으로 충족하고 주택의 거주 수요는 임대 청약으로 충족한다.

둘째, 상장하는 신축 주택의 구분소유권 공모주 배정은 현재 증권거래소의 기업공개(IPO)에 활용되고 있는 균등배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권 공모 물량의 70%를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이 외의 물량은 청약금에 비해 배분함으로써 과점적 혹은 독점적 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장할 수 있어 시세차익(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모주인 경우)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의 구분소유권은 일종의 증권이어서, 상장 이후에는 증권 가격으로(가칭)주택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되면서 시세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셋째, 세입자로 최종 당첨되는 입주자는 임대 공모 후 기존의 로또식 청약 방법으로 결정한다. 세입자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 거주서비스를 누리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임차료는 구분소유권을 가진 모든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배분된다. 최초 임차인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이후 주택의 관리와 임차인과의 계약 전반에 대한 사무업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여기서 구분소유권의 거래를 위한 새로운 거래소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정 상업용 빌딩을 대상으로 소유권 지분을 쪼개 공모 상장하고 지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카사코리아의 카사,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의 비브릭 등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제도의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술과 결합한 주택청약제도 혁신은 서류 중심의 계약 관행을 벗어나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

플랫폼 자율규제와 정부 개입의 최적점은?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플랫폼’을 빠뜨릴 수 없다. 소비자는 일상에서 플랫폼을 이용해 경제 활동을 하고,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을 플랫폼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다 보니, 그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고, 법안을 심사 중인 나라도 여럿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거세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그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플랫폼 규제의 중요한 척도는

유사한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 깊이 논하기에 앞서 플랫폼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통용되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어긋나지 않지만 경제학적으로나 규제 관점으로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플랫폼은 양측의, 혹은 그 이상의 이용자들이 만나서 거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플랫폼과 플랫폼이 아닌 것 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소비자가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때 소비자는 플랫폼 기업도 만나지만 다른 측 이용자도 만난다. 반면에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거래할 때 소비자가 만나는 거래상대방은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소비자는 슈퍼마켓 주인만 만나면 된다. 그 제조사 혹은 중간거래상을 직접 만날 일이 없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또 대형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렇다. 반면에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오픈마켓 운영자를 통하지만 실제로는 판매자와 직접 거래를 한다. 이 점에서 오픈마켓은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와 구별된다. 다른 예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주문을 하면 소비자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점 주인과 직접 거래한다. 신용카드라는 플랫폼을 상기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다. 신용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플랫폼인 신용카드는 거래를 보조할 뿐이고 상점 주인과 거래하는 것이다.

이제 규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먼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거래에는 어떤 규제가 적절할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한 가지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유사한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다. 오픈마켓과 유사한 대형마트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 오픈마켓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다면 대형마트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는 오픈마켓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를 오픈마켓으로 몰리게 해, 생산자가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기보다는 오픈마켓에서 직접 물건을 팔고 싶도록 만들 것이다. 현재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데는 이러한 요소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오픈마켓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능력이 우수해서 경쟁 우위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만, 정부의 규제 차이로 경쟁 우열이 가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의 거래는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 역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플

랫폼이 아닌 온라인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몰이나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오픈마켓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픈마켓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모색하기보다

피규제자 스스로 해결방안 찾도록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2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가 추진됐다.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했으며, 현재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 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의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그중에서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 결정된 자율규제 방안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의 역할을 한다.

자율규제는 정부 주도의 규제에 비해 상당한 장점이 있다. 피규제자는 대체로 정부에 비해 문제의 원인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적절한 대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비용도 감소한다. 스스로 마련한 방안이므로 순응도가 높고 정부의 집행비용은 줄어든다.

한편 단점도 있다. 피규제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원한다. 자율규제를 악용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단점이 발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기도 하는데, 개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예컨대 성과기반규제, 원칙기반규제, 공동규제와 같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동규제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안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협상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법적 기반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민간의 자율규제기관이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공동규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규제의 장점을 희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협상 중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록 자율규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피규제자가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모색하기보다 적절한 문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정부는 성과목표나 원칙을 제시하고 피규제자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플랫폼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이 규제에 의해 경쟁 열위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플랫폼과 적절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물론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후생도 고려하면서 말이다. ■

한편 플랫폼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이 규제에 의해 경쟁 열위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플랫폼과 적절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물론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후생도 고려하면서 말이다. ■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만둘 일 14가지 유형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보통 정부를 평가할 때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안 할 일을 하는지에도 관심을 뒤야 한다. 공무원들은 빠른 승진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더군다나 과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과를 거뒀던 기억이 있어 앞으로도 그런 개입이 성공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과잉기능은 국가의 활력과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그만둬야 할 일 14가지 유형을 알아보자.

국가 활력 낮추는 과잉규제·과잉지원

하나, 과잉규제다. 산업생태계로의 진입을 막는 것이 바

정부 역할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밖으로는 각 주체의 자율·책무·경쟁을 촉진하면서 안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그만둘 일을 찾아 제거하는 대형 정부개혁이 추진됐으면 한다.

로 규제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의 규제정책은 늘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문다. 일일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 일단 허용한 후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 옥석 가리기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

는 주체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다. 그러나 정부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옥석을 가린다. 정부의 결정은 틀릴 수도 있고, 맞더라도 패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택받은 기업은 경쟁에서 우위에 선다. 이는 경쟁을 훼손하고 기업에 정부와 친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셋, 과잉지원이다. 정부의 기업지원이 지나치면 재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기업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도 대기업이 정부의 과잉지원 아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하다 초래된 것이다. 과잉 지원은 기업의 퇴출을 늦춰 좀비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 시장잠식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수행하면 그 산업에선 성장의 핵심인 진입과 퇴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익을 올려 공익에 쓴다는 명분도 수용하기 어렵다. 필요한 공익 목적 사업은 예산을 배정해 수행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극하면 북한을 보면 된다.

다섯, 중앙집권이다. 중앙이 지방의 자율과 책무를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의 역량도 커진다. 지방분권은 국가혁신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컨대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전국적 추진이 어려운 일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서로 경쟁시켜야 한다.

여섯, 전 국토 균형발전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모든 기초단체 간 균형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역별 허브를 키워야 한다. 모든 시군이 수도권과 일대일로 경쟁해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뿐이다.

인기영합·전시정책 멀리하고

협력·소통은 강화해야

일곱, 인기영합이다. 정치의 행정 지배가 강화돼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여론을 고려하며 수립된다. 그러나 여론이 늘 장기적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영합 정책은 재정적자를 심화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인기는 없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인기영합이다.

여덟, 성과 경시다. 공직에는 성과 내는 것에 무관심한 채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투입 중시 행태가 만연하다. 아울러 성과와 무관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절차 중시 행태도 흔하다.

아홉, 대중정책이다. 공직자는 임기가 짧아 정책의 시야가 근시안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갈등과 비용이 따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피하면서 시행이 쉽고 당기에 효과를 내는 대중적 해결만 추구하게 된다.

열, 전시행정이다. 전시행정은 효과가 없는 일에 열심히 매달리면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는 그 자체로 비용을 소모할뿐더러 정작 중요한 일은 외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익을 훼손한다.

열하나, 면피정책이다. 이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막아 무형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경향도 변경에 따르는 책임을 피한다는 점에서 면피정책으로 분류된다.

열둘, 집행 소홀이다. 우리의 법규 중에는 위반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모든 기업이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정부에게 눈감아 주는 권한을 선사한다. 물을 현실화해 되 정해진 물은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법규의 미집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다.

열셋, 협력 부재다. 각 부처는 다른 부처와 공동 수행하거나 아예 다른 부처에 맡겨야 할 일도 자신의 정책수단에만 의존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 조직 내 부서 간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조직 간 협력 부재는 정책효과를 약화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열넷, 소통 부재다.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절차 없이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한 후 당사자를 설득하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비해 정부 역할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밖으로는 각 주체의 자율·책무·경쟁을 촉진하면서 안으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그만둘 일들을 찾아 제거하는 대형 정부개혁이 추진됐으면 한다. ■

※ 박진 블로그 '정책뒤집어보기: 중도와 대안, 2022.7.11.'(<https://blog.naver.com/jinparkinkr/222806908036>)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작성했음. 블로그에는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가 300여 개 제시돼 있음.

증가하는 가계빚, 부채 억제보다 포괄적 구조개혁이 중요

김미루 KDI 국제연구팀장



가계빚이 다시 늘고 있다. 고금리 정책 장기화 속에서 올 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4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맞물리면서 6월까지 월평균 4조6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율로 3.1% 수준이고 올해 경성 GDP 성장률이 5% 내외로 예상되고 있어 아직 부채 증가가 급격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향후 기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과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부채 증가 억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및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기대수명 늘면 자산 축적 동기 커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 빚도 증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는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 대출 규제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변동과는 별개로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장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봐도 그 추세는 꾸준히 상승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00.5%로 스위스(126.3%), 호주(109.6%), 캐나다(102.3%)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반적인 부채 상승과 더불어 2000년대부터 자본차입 비용을 나타내는 실질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실질금리의 하락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즉 기업이 추가적인 자본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생산량이 점차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보다 자본 스톡(stock)이 더 빠르게 증가했고, 나아가 기업의 자본 수요보다도 경제 전체에서 자본 공급이 더욱 빠르게 확대돼 왔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채 조달 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빚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 돈을 빌리는 가계는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당겨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이로써 향후 갚아야 할 부채가 생긴다. 반면 돈을 빌려주는 가계는 현재 발생한 소득을 미래로 이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자산이 축적된다. 즉 누군가의 부채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되며, 따라서 부채 증가는 항상 자산 증가를 수반한다.

가계의 자산 축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가 자산을 축적하는 주목적은 향후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유지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다면 가계는 현재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해야 하고, 그 결과 가계의 자산이 증대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평균 0.4세씩 꾸준히 증가했다. OECD 평균인 연평균 0.2세보다 두 배 빠른 속도다. 반면 생애 주요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2000년대 초반부터 50세 내외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기대수명 증가로 자산 축적의 동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왜 가계빚도 함께 증가하는 것일까?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가계빚이 주택 구매와 같은 자산 취득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주택을 구매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이는 주택 구매의 효용을 높여 수도권 집중 심화와 더불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층은 예전보다 상승한 주택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청년층이 빚을 내 집을 사는 행위는, 내구재 소비(주거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누리는 소비 평활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택이 자산이라는 점에서 노년에 이를 유동화해 소비를 유지하려는 저축 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빚내서 저축하는 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난 20년간 중위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은퇴연령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매우 낮은 출생률이 지속되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국가의 평균 잔여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이로써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신규 부채 수요도 줄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체계·정년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 사회 이동성 개선 필요

이러한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80%, 100%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금융시장

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순히 금융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노동개혁 등 다양한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호봉제와 같은 비효율적인 임금체계가 지속되면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제약돼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과도한 자산 축적 동기는 다시 민간부채의 전반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와 정년제를 개편해 고령층이 계속 일하면서 적절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과도한 부채 수요를 줄이는 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수도권 거주 유인이 커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 이동성이 악화되고 가계 간 자산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티브 미안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수행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MPC)이 낮아지고 자산 축적이 심화된다. 따라서 소수가 경제 전체의 부를 독점하게 되면 이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부채 문제가 심각할수록 유사시 시행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점차 떨어져 소득 불균형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소득 분위 간 이동이 감소함에 따라 자산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생애 주기에 따라 소득 수준이 변화하는 만큼 아무도 빚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가계가 적절히 빚을 활용해 생애 주기 전반에서 소비와 자산 축적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단순한 부채 억제 정책보다는 경제 구조와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지방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집중된 거점도시가 필요하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월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청사의 위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김포시가 서울로의 편입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논의가 커졌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로 교착상태에 빠지며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1960년대 산업화로 인구 빠르게 유입된 서울, 강남·강서·강북으로 크게 확장

행정구역과 관련한 위와 같은 논의는 근본적으로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며 촉발됐다. 20세기 이후 교통과 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대도시가 다수 부상했다. 세계 곳곳에서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로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열차와 자동차 등 교통의 발전은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

만 이러한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기존 행정구역과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대도시의 생활권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게 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들은 행정구역을 개편해 생활권과 일치시키려고 했다. 일본에서는 1940년대 수도인 도쿄의 행정구역을 도쿄도(都)로 개편했다. 현재 도쿄도의 크기는 서울(605km²)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2,194km²이다. 따라서 도시를 비교할 때는 도쿄도 내 도쿄특별구(622km²)에 해당하는 23구만을 기준으로 서울과 비교하곤 한다. 영국 런던도 행정구역을 확대한 도시다. 1965년에 기존의 런던시를 포함하는 광역 런던(Greater London)이 탄생했으며, 면적도 1,572km²에 이르게 됐다.

과거에 서울도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특히 1963년에 서울은 3~4차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며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울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돼 도시의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에 서울은 행정구역을 강남과 강서, 강북 방향으로 크게

확장했다. 현재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 그리고 강서구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은 이 시기에 확장된 지역이다. 하지만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며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 최근 김포를 비롯해 과거 과천이나 구리, 광명 등도 서울 편입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는 행정구역 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중앙정부의 조율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도 생활권이 확대되며 주변 지역과 협력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와 협력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에 건설된 위례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이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은 더욱 힘들어졌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서울생활권이 커지며 자연스레 인근 지역과의 생활권 문제를 해소했던 서울과 달리 지방의 대도시는 단순히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 이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 대도시의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와 울산은 지난해 1%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일찍부터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2016년 인구가 3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자리를 내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며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낮다. 청년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세계적인 산업 발전의 흐름 속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제조업은 발전이 정체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 효

과가 단기간에 그쳤다.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유니콘기업은 지방에서 등장하지 못했으며 가젤기업이라 불리는 고성장기업의 비율도 매우 낮다. 중앙정부로부터 추진된 정책들은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접 지역이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

메가시티를 거점으로 함께 혁신 도모해야

서울과 달리 지방에는 거점도시(cognitive hub)라 불릴 만한 세계적인 대도시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4차산업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은 고학력·고숙련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더욱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이 부산보다 생산적인 이유는 서울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주변의 많은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도시의 생산성이 인구밀도와 비례하는 현상을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라 하며, 이는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비수도권에도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집중된 거점도시를 조성해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혁신을 이뤄낼 때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대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논의가 한창이다. 비록 대구의 메가시티 논의는 장기과제로 남았지만, 대전·세종·충주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메가시티 구상과 같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인접한 지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방식은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메가시티를 육성해 거점화하고 그 거점에서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때 지역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이 함께 발전방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을 두고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돼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수도권과 버금가는 지역의 메가시티가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이유

김주훈 전 KDI 선임연구위원

1990년대 초 시작된 중국의 산업화로 우리 산업구조가 뿌리까지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지형은 크게 섬유·전자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구로단지 및 그 인근 지역의 수도권과,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 형성된 울산·창원 등 동남권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까지도 수출의 최대 품목이 섬유제품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 기여도는 노동집약산업이 더 높았다. 섬유와 신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의 구입에 사용됐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입되면서 혼잡비용이 커지는 고통이 따르기는 했지만, 생산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은 수도권 산업단지로 인력이 이동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산업화로 노동집약산업들이 붕괴되고 수도권의 성장이 약화됐지만, 그 대신 중국의 산업화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를 생산하던 동남권은 전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성장은 비로소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울산은 1인당 소득이 서울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다시 한번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돼 온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됐고 때 맞춰 AI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대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산업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병목현상이 개선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각 차종별로 생산라인이 나뉘었고, 수요가 변화하면 인위적으로 차종 간 작업량을 조정해 줘야 했다. 그리고 자동차 수요량이 변화하면 철강공장에 일일이 주문 변경을 넣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는 AI를 활용한 제어프로그램이 작동돼 생산라인이 수요 변화에 동기화됨으로써 순식간에 자동으로 조정된다. 주문 변화 또한 온라인으로 연결된 철강공장으로 실시간 전달된다. 이 모든 것은 생산활동이 최적화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제품 단위당 생산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그동안 생산비를 낮추려 개도국 생산지를 찾아다니던 선진국 기업들은 자국 내 생산지로 속속 회귀하고 있다.

청년들, 미래 기약하기 어려운 지방보다는 디지털화 진행되는 수도권에서 미래 찾아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노동집약산업이 붕괴됐고 수도권에서는 그 빈자리를 소프트웨어 등 IT서비스산업이 채웠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는 IT서비스업체들의 입주에 날개를 달아줬다. 제조업체들과 공장부지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섬유산업의 붕괴로 공동화돼 가던 구로단지는 IT기반의 가산디지털단지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의 80%가 수도권에 몰렸다(2020년 기준).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높아진 IT서비스업이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했을 뿐 아니라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제조업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신속히 진행해 수도권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에 반해 동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인근에 협업할 IT서비스업체를 찾기 어려워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주력산업이 지배적인 동남권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돼 성장이 더욱 위축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변화로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을 이루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도 심화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주력산업이 포진한 동남권에서



전남 여수시 여수산업단지 야경. ©연합뉴스

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당장 취업은 가능하지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주력산업보다는 디지털화가 착실하게 진행되는 수도권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면 동남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IT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산업 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을 디지털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본국 회귀가 진행되는 미국에서 수출이 거의 폭발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증가는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첨단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재래산업의 상징 같던 철강산업이 연평균 18% 수준의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주력산업들도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그동안 동남권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된 것은 주변에 협업할 IT 서비스업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들을 유인하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성공하더라도 취업 후 가정을 꾸리기 위한 주거 마련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인구 유입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간 경쟁을 높여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2015년 이후 수도권의 GRDP 상승과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체로 한국의 세계 수출 점유율도 저하

끝으로, 최근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산업의 창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산업들 로까지 디지털 전환을 확산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안 한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지체된 결과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기존 산업의 디지털 변신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엔비디아는 잘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제 기업의 미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혁신의 속도에 달려 있다. '현재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진리가 됐다. AI로 대변되는 기술 혁명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빠른 적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오늘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이하 다우지수) 변화는 바로 그런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준다.

미국 다우지수는 미국경제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3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1월 한때 반도체산업의 거인이었던 인텔이 퇴출되고 AI 반도체의 신흥 강자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2014년 인텔의 시가총액은 1,600억 달러로 엔비디아(100억 달러)의 16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제는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훌쩍 넘기며 인텔(940억 달러)을 35배 차로 압도하고 있다.

애플·아마존·엔비디아, 혁신 바탕으로 다우지수 편입... 코닥·GE·AT&T는 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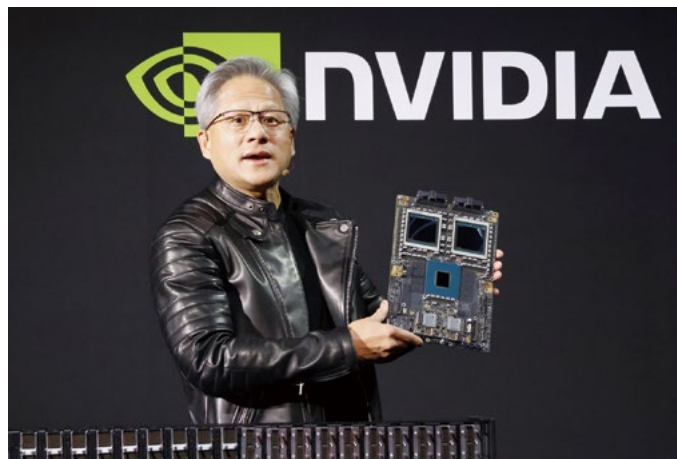
이는 비단 인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 강자였던 코닥, 제너럴일렉트릭(GE), AT&T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좌초했다. 한때 필름, 전자제품, 통신 산업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으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우지수에서 제외됐다. 반면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은 급격히 발전하는 AI,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바탕으로 다우지수에 편입됐다.

1999년 다우지수에 편입된 인텔은 당시 반도체산업의 미래였다.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하며 디지털 혁명을 이끈 상징적 기업이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문구는 곧 기술력과 혁신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대

는 빠르게 변했다. AI라는 새로운 물결이 몰아치면서 인텔의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성능 AI 칩 시장에서 인텔은 후발주자로 전락했고,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기업은 이제 '퇴보'의 사례로 회자될지도 모른다. 불과 20여 년 만의 극적인 반전이다.

반면 엔비디아는 달랐다. AI와 GPU 시장의 잠재력을 일찍이 간파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AI 시대의 '총아'로 부상하며 다우지수 편입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시가총액에서도 한때의 스승이었던 인텔을 압도적인 차로 따돌렸다. 이 극적인 자리바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오늘의 혁신 기업이 내일도 혁신 기업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는 순간 그 기업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엔비디아는 1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비교 자체가 어려웠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0배나 더 큰 공룡 기업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천지개벽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500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전자(393조 원)



지난 11월 13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11배 차로 압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AI 시대를 선점하는 데 혁신적 속도로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와 모바일 기술에서 쌓아 올린 성과는 분명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AI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영광은 순식간에 빛이 바랬다. 오늘의 현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발 빠른 속도 전환과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대·중소기업 협업 촉진하고 근로시간 등 규제 완화해 혁신 속도 높일 환경 조성해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기술력은 이제 미국의 86% 수준으로 추락했다. 2019년만 해도 92.9%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AI 혁명을 주도하며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대만의 TSMC는 유연한 연구 환경과 파격적 인센티브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각종 제도적 제약에 발이 묶여 있다. 한 예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유연한 근로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은 가속화되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안주하는 동안 세계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AI와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반도체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우리 기업과 정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업들은 첫째, AI와 고성능 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이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에 맞는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 AI 처리에 특화된 칩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둘째, AI와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유연한 근로 제도 등 법·제도의 정비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AI, 반도체 같은 고속 성장 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에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더욱 민첩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AI 인재 양성이다.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셋째, AI R&D 지원 강화다. AI와 고성능 반도체 분야의 R&D에 지원을 대폭 강화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비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 생태계 육성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혁신과 연구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근로시간 규제는 유연화하면서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격차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닌 만큼 그 극복에는 장기적 안목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의 속도가 빠른 AI와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민첩한 대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편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K인사이트
2024**